

대우조선 합친 현대중, 글로벌 조선 압도적 1위 '야심'

현대중, 대우조선 인수

통합 후 점유율 80%대 '독주체제' 빅2로 재편... 과다경쟁 완화될 듯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등 과제 산적

KDB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을 위한 조건부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에 따라 세계 조선업계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조선 '빅3'의 빅2 재편이 본격 진행되는 것이다.

3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 거대 글로벌 1위 조선사로 거듭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업계 1위인 현대중공업의 조선 부문 점유율은 52.5%로 2위 대우조선해양(27.6%)과 3위 삼성중공업(19.7%) 보다 2~3배 가량 높다. 이런 상황에 업계 1~2위가 통합되면 현대중공업의 점유율은 80%대로 불어나게 된다. 사실상 현대중공업의 독주체제가 되는 셈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이 31일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한다. 인수가 성사되면 국내 조선업계는 기존 '빅3'에서 '빅2'로 재편된다. 사진은 이날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목포조선소 전경. /연합뉴스

수주잔량도 압도적이다. 클락스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수주잔량 1위는 1만1145CGT를 보유한 현대중공업 그룹, 2위는 대우조선해양으로 5844CGT다. 두 회사의 수주잔량을 합치면 1만 6989CGT로 3위인 일본 이마바리(5253CGT)보다 3배 많고 5위 삼성중공업(4723CGT)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많다.

글로벌 조선 시장은 살아나고 있지만 공급 과잉으로 '빅2' 체제 개편에 대한 목소리는 계속 제기돼 왔다. 국내의 경우 기술력이 비슷한 조선 3사가 과다경쟁을 벌이며 수익성 회복이 더뎠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방산뿐

만 아니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초대형 원유운반선 등 사업구조가 거의 겹치기 때문에 두 회사가 하나가 되면 겹치는 사업을 조정해 상승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조선업황은 회복 중이지만 공급과잉 문제로 조선 3사간 수주잔량을 낮추는 출혈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가 결정 되면 공급과잉 문제가 해결돼 과다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어 조선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두 회사의 사업구조 상 겹치는 분야가 많아 인수합병이 이뤄지면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대우조선해양 인수 추진 소식에 31일로 결정된 임금 및 단체협약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 찬반투표를 연기했다.

당초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5월 임단협 교섭을 시작한 이후 약 7개월 만인 12월 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지난 25일 열린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기본급

동결 문제로 부결된 바 있다. 최근 기본급을 인상한 두 번째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며 설 연휴 전 타결에 기대감을 높여 왔지만 또 다시 미뤄지게 됐다.

한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이 성사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 합병심사는 통상 120일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과하더라도 다른 국가 경쟁당국의 심사도 받아야 하기에 최종 합병 성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무엇보다, 특히 여러 국가 중 단 한 곳이라도 합병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합병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기업결합을 할 때 직접 사업연도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신고회사 3000억원 이상, 상대회사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에 신고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작년 5월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산총액 규모는 현대중공업이 56조1000억원, 대우조선해양이 12조2000억원으로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설 명절 앞둔 전통시장

설 연휴를 앞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시민들이 수용품 등을 구매하기 위해 상점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靑, 지역 균형발전·과세 논란 바로잡는다

'복지포인트' 과세 형평성 등 공무원-민간인 균형잡기 나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 사업들을 공개한 후 '공무원·민간인 균형잡기'에 시선을 돌린 모양새다. 균등한 지역발전과 함께, 그동안 불거진 과세 형평성 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기 자회견 때 언급한 '함께 잘사는 경제'의 연장선상이기도 하다.

청와대의 '공무원·민간인 균형 잡기' 움직임은 이렇다. 이제진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지난 30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오찬을 했고 "우리 국민들이 공공부문 확대에 대해 거부감이 크다"고 직언했다. 이어 "그러니 공공부문 확대와 더불어 공공부문 개혁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의장이 속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경제정책 관련 운영 방향' 등을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구다.

문 대통령을 향한 이 부의장의 직언이 있던 날, 청와대가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를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정부의 맞춤형 복지제도' 일환으로 지난 2005년부터 모든 공무원들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공무원들은 복지전용 카드 또는 일반 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연합뉴스

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뒤 영수증을 자체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국민일보의 지난 30일 단독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 산하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통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에는 소득세가 붙는 반면,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실정이다. 정부가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복리후생비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투입된 국민 혈세는 약 6조원에 달한다.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지적은 작년 국회 국정감사 때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당 의원은 그해 10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5년간(2013년~2017년) 공무원에게 지급

된 복지포인트에 일반근로자처럼 건강보험료를 매겼다면 3459억원을 징수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일반근로자 복지포인트와 달리, 공무원 복지포인트에만 건강보험(과세)이 부과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공무원사회의 반발을 예상했던 걸까. 청와대는 31일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 검토'를 일단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 검토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다만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비롯한 공공부문 개혁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전문가들과 정치권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31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과세를 내지 말라는 법적 근거가 없다. 세금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세금을 안 낸다면 누가 세금을 내려고 하겠냐"라고 꼬집었다.

의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 역시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비롯해 공공부문 개혁에 현 정부가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본다. 그러지 않는다면 이 부의장 발언처럼 국민들의 공무원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더 거부감이 쌓일 것"이라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

은행 예·적금 금리 2%대 회복

기준금리 인상... 4년만에 최고치

지난해 11월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12월 은행들의 예·적금 금리가 47개월 만에 2%대를 회복했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2018년 12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2.05%로 전월 대비 0.09%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5년 1월(2.09%) 이후 3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다.

정기예금 유치 노력으로 정기예금(2.05%)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전월보다 0.1%포인트 올랐다. CD(양도성예금증서)와 RP(환매조건부채권) 등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2.04%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대출금리는 연 3.72%로 전월 대비 0.06%포인트 상승했다.

기업대출은 전월 대비 0.08%포인트 상승한 3.77%로 나타났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3.5%로 전월 대비 0.08%포인트,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3.98%로 0.11%포인트 올랐다.

반면 가계대출 금리는 3.61%로 전월보다 0.0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2017년

12월(3.61%) 이후 1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3.19%)는 전월보다 0.09%포인트 하락해 지난 2017년 2월(3.19%)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집단대출 금리(3.23%)도 0.07%포인트 내렸다. 반면 단기 시장금리에 영향을 받는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4.64%로 전월보다 0.08%포인트 상승했다.

예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더 큰 폭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67%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축소됐다. 반면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31%로 전월과 같았다.

지난달 비은행금융기관 예금금리(1년 만기 정기예금 기준)는 보험세를 보인 상호저축은행(2.69%)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신용협동조합(2.61%)과 새마을금고(2.56%)는 각각 0.03%포인트, 0.07%포인트씩 올랐다. 상호금융(2.26%)도 0.05%포인트 상승했다.

일반대출 기준 대출금리는 새마을금고(4.50%)만 전월 대비 0.09%포인트 올랐다. 상호저축은행(10.28%)과 신용협동조합(4.82%), 상호금융(4.14%)은 각각 0.34%포인트, 0.09%포인트, 0.03%포인트씩 내렸다. /김희주 기자 hj89@

美 기준금리 2.25~2.50% 동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행 2.25~2.50%에서 동결했다. 미 연준은 보유자산의 점진적인 축소 계획에도 변화를 줄 뜻을 밝히면서 본격적인 금리인상 속도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1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

나 미 연준의 FOMC 결과에 대해 "시장 생각보다 더 완화된 입장이었다"고 평가했다고 평가했다.

미 연준의 금리동결은 시장의 예상대로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달 초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의 약 60%는 연준이 현재 2.25~2.50% 수준인 금리를 5월까지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준은 성명에서 "세계 경제 및 금융의 전개와 '낮은(muted)' 물가 상승 압력을

이주열 "美, 생각보다 완화적" 본격적인 금리인상 속도 조절

고려해 연방금 금리 목표 범위에 대한 향후 조정을 결정할 때 인내심을 가질 것"이라며 향후 금리 결정에 인내심을 갖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성명에서 '추가적·점진적인 금리 인상'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금리인상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실었다. 연준이 지난 2015년 '제로금리' 정책 종료로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금리인상 중단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김희주 기자